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4호 2020

e-세계농업

- ❖ 유럽그린딜과 농업부문 전략
- ❖ 미국 식량·농업 정책 전망
- ❖ OECD 녹색회복을 향한 기후전문가 논의 동향
- ❖ EIU 10대 글로벌 리스크
- ❖ 국제 농업 정보 I
  코로나19 관련 농업·농촌·식품 동향
- ❖ 국제 농업 정보 II
  미국, 유럽,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편집위원

• 편집위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장**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경필**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손학기**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덕**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명기**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형진**	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대석**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어명근**	시니어이코노미스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학균**	연구위원	전남대학교	**김윤형**	교수
			충남대학교	**한석호**	교수

「e-세계농업」은 홈페이지(https://www.krei.re.kr/wldagr/index.do)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담당

김수석	명예선임연구위원	soosuk@krei.re.kr	(Tel. 061-820-2284)
김상현	부연구위원	sanghyun@krei.re.kr	(Tel. 061-820-2280)
홍예선	연구원	hongye0330@krei.re.kr	(Tel. 061-820-2298)
김령임	연구원	ryeongimkim@krei.re.k	(Tel. 061-820-2231)

유럽그린딜과 농업부문 전략

최 형 식*

유럽그린딜 계획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달성을 통하여 기후를 보호하고 저탄소 산업을 육성하는데 선두에 서고자 하는 것이며 농업부문 전략은 그린딜 계획의 중요한 축으로서 농업 생산 및 소비 방식의 전면적인 변화를 통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1 성장전략으로서의 유럽그린딜

■ [주요내용] 유럽연합이 2019년 12월에 발표한 그린딜(Green Deal) 계획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통하여 기후변화를 억제하고 동시에 탄소 중립경제의 선도자(first mover) 역할을 수행하여 경제성장에 기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 목표를 제시하는 보고서[1]에서는 그린딜 계획을 통한 탄소 중립경제 선도적 역할로 인해 유럽연합이 2% 추가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함.

■ [코로나 이후 유럽 그린딜] 코로나 대 유행 이후에도 그린딜은 경제회복과 녹색 및 디지털 투자를 통한 지속가능 발전 전략으로서 단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7월 21일 각국 정상들은 유럽정상회의(EU council)에서 사상 최대인 총 2,553조원 EU예산 계획에 합의함.[2]

- 2,553조원 예산은 1,050조원의 코로나 경기회복 예산(Next Generation EU)과 2021-2027 장기재정계획 예산(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1,503조원으로 구성됨.

- 코로나 경기회복 예산은 546조원의 지원금과 504조원의 대출로 구성되며 2021년 첫해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예정임.

- 장기재정계획 예산은 향후 7년간 사용될 것으로 녹색 및 디지털 전환 투자에 집중되며 예산의 30%는 기후보호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녹색기술센터 정책연구부(hyungsik.choi@gtck.re.kr)

1) COM(2018)773 final, "A Clan Planet for all"

2) The European Council,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the-eu-budget/long-term-eu-budget-2021-2027/) (검색일: 20120.08.01.)

유럽그린딜과 농업부문 전략

■ **[분야별 주요 전략]** 총 8가지 부문(기후, 에너지, 산업, 건물, 수송, 농업, 생물다양성, 환경)에서 기후 중립과 지속가능한 경제 및 환경 구축을 위한 그린딜 목표를 세우고 3가지 부문(금융, 공정전환, 연구개발 및 혁신)에서 달성 수단을 제시함.

- 2020년 1월 4일 유럽 그린딜 투자 계획 및 공정 전환 메카니즘 발표
- 2020년 3월 4일 유럽 기후법 초안 발표
- 2020년 5월 20일 지속가능한 식품 시스템 구축을 위한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 전략" 발표
- 2020년 5월 20일 EU 생물다양성 전략 발표
- 2020년 7월 8일 에너지 시스템 통합 및 수소 전략 채택

| 유럽 그린딜 전략의 부분별 정책 수단들 |

전략 부문	세부지침
기후	기후변화법, 배출권거래제, 토지 및 산림규정, 에너지 효율 지침, 재생에너지 지침, 자동차 CO_2배출 규정
에너지/건물	국가 에너지/기후 계획 평가, 스마트 섹터 통합, "Renovation wave"계획, 유럽 통합 에너지 네트워크 규정 평가, 해양풍력 전략
산업	EU 산업전략, 순환경제, 에너지 다소비 산업분야 탈탄소 전략
수송	스마트 수송전략, 철도 및 수상 운송 확대,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내연기관 규제
농업	"Farm to Fork" 전략, 농약/항생제/비료 사용 저감을 위한 법률 제정
생물다양성	EU 2030 생물다양성 전략, 생물다양성 감소 대응 방책 마련, EU 산림 전략
환경	지속가능한 화학물 전략, 물·대기·토양 오염 제로 액션 플랜, 대형 산업 단지 오염물 관리 규정 개정

자료: COM(2019) 640 final ANNEX "The European Green Deal"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 **[기후 목표]** 2050년 온실가실 순배출 제로 달성을 위해 기후법(climate law)을 채택하여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무화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기존 90년 대비 40%감축에서 50-55% 목표를 상향 조정할 예정이며,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를 2023년 1월 1일부터 도입할 예정임.

- 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 거래제를 기존 발전 및 산업부문에서 교통, 난방, 건물분야로 확대할 예정임.
- 에너지 세제 개편을 통해 탄소 가격이 미치는 경제 영역을 확대함.
- 유럽 내 높은 온실가스 규제로 인해 유럽 내 기업이 해외로 생산을 이전하여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감축 노력을 수행하지 않는 국가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예정임.

유럽그린딜과 농업부문 전략

■ **[에너지 시스템 통합 및 수소 전략]** 에너지부문은 EU온실가스 배출의 75%를 차지하며 에너지 시스템 통합과 수소는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에너지 부문에서 대규모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코로나 경제 위기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함.

- 에너지 시스템 통합은 에너지 순환(circular) 시스템 구축,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최종 에너지 전력화와 전력화가 어려운 분야에서는 청정 연료(그린 수소[3]), 바이오연료, 바이오가스)를 통해 에너지 전환과 통합을 달성할 것임.

- EU 수소전략에서는 그린 수소 생산과 활용에 중점을 두어 2024년까지 최소 6GW의 재생에너지 기반의 수전해 그린 수소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100만 톤의 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며 2030년에는 40GW의 수전해 그린 수소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1,000만 톤의 그린 수소를 생산할 계획임.

2 유럽그린딜의 농업 전략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

■ **[주요 내용]** 그린딜에서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은 생물다양성 전략과 함께 자연환경과 식량 시스템, 생물다양성의 상호 영향을 주는 관계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정립하고 EU의 산업 경쟁력과 자연 회복력을 높이려는 것임.

- 농업은 EU 온실가스 배출의 약 10%를 차지하며, 이중 70%는 축산부문에서 발생함.

- 에너지 시스템과 달리 농업 시스템은 기후 및 생태계와 보다 직접적인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며 기후변화 적응, 농촌지역 균형 개발, 시민 건강, 농식품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문임.

■ **[6가지 부문별 목표]** 전 식량 공급 가치 사슬 중 총 6가지 부문(식품생산, 식량안보, 식품 가공/유통/소매/서비스, 식품 소비, 음식물 쓰레기, 식품 공급망의 안전성)에서 지속가능한 목표와 구조적 시스템 개혁을 제시함.

■ **[식품 생산 부문 세부 목표]** 생산부문은 농업 생산 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유기농법 및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하여 비료, 농약과 같은 투입 자원을 최적화하고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생산 부가가치를 늘리는 것임.

- 탄소 농법을 활용해 토양에 탄소를 저장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인정받고 이에 대해 공동농업정책(CAP)

3)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기반 전기로부터 생산되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

유럽그린딜과 농업부문 전략

보조금이나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녹색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 온실가스 감축을 인증할 수 있는 탄소 회계 시스템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함.

- 순환 바이오 경제(circular bio-based economy)를 농업 생산시스템에 구축하기 위해 농업 부산물 및 가축 분뇨를 원료로 혐기소화 기술을 활용해 바이오 메탄 및 바이오 비료(bio fertilizer) 생산 확대함.
- 2030년까지 화학 농약 사용과 위험을 50% 줄이고 유해한 농약의 사용과 위험을 50% 줄일 것
- 2030년까지 비료 사용을 최소 20% 줄이고 토양 비옥도(fertility) 손상 없이 영양소 손실을 최소 50% 줄이는 것
- 2030년까지 가축 및 수산양식에 사용되는 항생제 판매(sales)를 50% 줄일 것
- 20303년까지 25%의 농지의 경작 방식을 유기농으로 전환
- 새롭게 제시될 CAP은 환경 목표 준수를 의무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결과 중심적인 모델을 제시하여 환경 목표 달성에 충실한 농민에게 소득을 지원할 것

■ **[농업부문 전환을 위한 이행 전략]** 생산부문 이외에도 유통, 소비, 연구개발,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농업 시스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함. 특히 식품 정보 고도화를 통해 합리적 선택을 유도하고 식품 생산 가치사슬의 효율성을 개선함.

- **(식단)** EU에서 약 95만 명이 건강하지 않은 식단으로 인해 사망하기 때문에 보다 건강한 식품, 식물성 식단을 늘려 질병을 줄이고 농업 시스템의 환경 영향 줄임
- **(라벨링)** 식품 라벨링을 표준화하고 의무화하여 지속가능한 식품 라벨링 프레임워크를 제안할 예정이며 이는 영양, 기후,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포함할 것
- **(음식물쓰레기)** 2030년까지 소매 및 소비자 단위에서 1인당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절반으로 감소시키고 2023년까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음식물 쓰레기 감축 목표 제시
- **(연구개발과 혁신)** 2027년까지 호라이즌 유럽 과학연구개발 프로그램에서 식품, 바이오경제, 자연 자원, 수산업, 농업 및 환경 분야에 총 140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농장 단위의 전환을 위한 지식 서비스 제공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 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농업부문 전환을 지원
- **(글로벌 전환)** 제3세계 국가 및 타 국가와 협력하여 글로벌 농업시스템 전환 연합을 구축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도록 지원 및 협력할 예정이며 식품 라벨링 프레임워크를 국제화하여 소비자의 친환경 소비에 대해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할 계획

유럽그린딜과 농업부문 전략

3 시사점

■ 유럽연합의 그린딜은 단기적으로는 녹색·디지털 산업 투자로 코로나 이후 부진한 경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화하여 저탄소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으로 볼 수 있음.

- 유럽연합이 예고한 탄소 국경세는 양자 간 논의를 통해 2021년 말까지 탄소세 적용 방식과 범위에 대해 검토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2023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임.

- 국내에서는 유럽과 그린뉴딜 사업 협력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내에 미치는 탄소 국경세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책을 마련한 필요가 있음.

■ 유럽연합의 그린딜은 에너지 산업 관련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농업과 관련한 생물다양성, 친환경 농법, 농식품 가치 사슬 전반의 전환 계획을 제시하여 농업을 통한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계획을 마련하였고 농촌 지역과 균형 발전을 도모함.

- 국내 그린뉴딜 계획에서는 농업과 관련한 지속가능성 전략이 제시되지 않아 추후에 농업 시스템 전환 전략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유럽은 농식품 무역에서도 라벨링을 통하여 탄소 배출 및 환경성, 항생제 사용, 동물 복지 수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계획을 밝히고 있어 국내에서도 지속가능성 기준과 데이터를 구축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함.

참고문헌

European Commission. 2019. “The European Green Deal”.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Commission. 2020. “A hydrogen strategy for a climate-neutral Europe”.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Commission. 2020. “A Farm to Fork Strategy for a fair, healthy and environmentally-friendly food system”. European Commission.

미국의 식량·농업 정책 전망[1)]

이 수 환*

2020년 미국 식량·농업 정책 전망과 관련하여 FDA의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및 햄프(Hemp)에서 추출된 칸나비디올(CBD)제품 규제를 둘러싼 이슈, 그리고 영양성분표시 라벨 개정 내용을 살펴봄

1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

■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의 2020년 주요 업무는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FSMA)」에서의 농장에 대한 정의와 농식품 공급사슬에서의 서면 확약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규제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식품의약국의 「식품안전현대화법」시행 강화를 위한 조치들과 최근 로메인 상추의 이콜라이(E.Coli) 대장균 발생에 주목하고 있음.

■ 식품의약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식품안전현대화법」 준수가 순조롭게 진행되며 '규제 시행 전 교육' 단계는 거의 끝난 상태로 최근에는 「식품안전현대화법」을 준수하지 않은 농식품업체를 대상으로 경고 서한을 보내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함.

- 식품마케팅연구소(Food Marketing Institute, FMI)에 따르면 검사 중 전례없는 지원과 교육활동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농식품업체들은 공급사슬 전체에서 「식품안전현대화법」 준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함.

- 또한, 수입 농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증 강화를 위한 해외공급업체검증제도(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FSVP)는 최근 일부 수입업체들만 컨설팅을 요청할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심지어 대형 소매업체들은 수입 식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해외공급업체 검증제도의 세부사항 준수 여부를 요구하고 있음.

- 식품의약국은 2019년 7월에 해외공급업체검증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타히니(tahini) 수입업자에게 처음으로 경고 서한을 보냈으며, 2020년에는 해외공급업체 검증제도 준수 여부 검사 및 경고 서한 전달 횟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1) 이 글은 IHS Markit의 「Food & Agriculture Outlook 2020」 보고서 중 미국 식량 및 농업 정책에 관한 부분을 발췌·정리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suhwan8352@krei.re.kr)

미국의 식량·농업 정책 전망

■ 식품의약국은 최근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에서 재배된 로메인 상추에서 이콜라이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점차 확산되고 있어 농산물의 안전한 재배, 수확, 포장 및 보관 등을 위한 생산안전규정(Product Safety Rule) 준수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조치가 빠른 시일 내에 강화될 것이라고 밝힘.

- 생산안전규정은 2016년에 처음 발효되었으나, 충분한 훈련 및 기술지원 기간 확보를 위해 검사 시행일을 2019년 봄으로 연기하였고, 농업용수 검사를 포함한 일부 핵심조항들은 해당 산업계가 식품의약국의 검사방식에 대한 실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2022년까지 시행을 연기하였음.

- 생산자단체는 로메인 상추의 이콜라이 대장균 검출로 인한 리콜사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별도의 T/F를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로메인 상추의 오염 방지를 위한 연구자금 지원과 로메인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라벨링 부착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그러나 미국의 일부 여론에서 생산안전규정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항이며, 2020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로메인 상추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는다면 식품의약국에서는 해당 지역에서 상추분말 형태의 유통이 가능하도록 허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식품의약국은 2020년 「식품안전현대화법」에 따른 고의적 식품변조 방지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승인된 실험실에서 식품 검사 실시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식품 검사 실험실 승인을 받기 위한 표준모델 개발 규칙을 제안함.

- 식품의약국은 당초 2013년까지 해당 규칙을 제안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여러 이유로 지연되었고, 2019년에는 일부 소비자단체들이 식품의약국이 식품 검사 프로그램을 수립하지 않아 소비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고소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식품 검사소 승인을 위한 최종 규칙을 제안함. 이 제안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 확립을 위해서는 최소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식품안전현대화법」과 관련된 또 다른 이슈는 식품안전 사고 예방임. 식품의약국은 2012년 1월까지 '고위험 식품군'을 지정하고 2013년 1월까지 이를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특별 기록 보관 요건을 제안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지금까지도 고위험 식품 지정 방식과 관련한 여러 어려움들이 발생하며 이행이 쉽지 않은 실정임.

- 식품의약국은 소비자단체와의 법원 합의사항으로 2020년 9월 8일까지 '고위험 식품'을 지정하고, 이를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특별 기록 보관 요건을 제안해야 함. 또한, 2022년 11월까지 이와 관련된 최종 규칙을 발표하고 고위험 식품 목록을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함.

- 식품의약국은 당초 2014년에 총위험점수(total risk scores) 기준으로 모든 식품 범주에 순위를 매겨 '고위험 식품'을 지정하려 하였으나, 이러한 접근방식은 향후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하므로 충분한 검토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을 보류한 상황임.

2 칸나비디올(Cannabidol, CBD)사용 합법화 관련 이슈

■ 미국은 2018년 12월 20일 「농업법(Agriculture Improvement Act of 2018)」을 개정함으로써 햄프(Hemp)에서 추출된 칸나비디올(Cannabidol, CBD)[2] 사용을 합법화하였으며, 미국 연방 관리기관인 식품의약국(FDA)에서는 CBD 관련 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규제 및 시행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에 착수함.

■ 햄프에서 추출된 CBD는 2018년 미국의 「농업법」 개정으로 「미국규제약물법(Controlled Substances Act)」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식품의약품화장품법(Food, Drug, and Cosmetic Act, FD&C)」과 「공중보건서비스법(Public Health Service Act)」 제351항에 의해 대마초 및 대마초 유래 제품에 포함되어 규제를 받고 있음.

- 식품의약국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의료용 CBD 제품 판매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의료용 목적 이외 화장품, 식품, 식이보충제에 사용할 경우 반드시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미국 소비자들은 2019년에 2억 달러 이상의 CBD 관련 식품, 식이보충제, 진통제 연고 등을 구매하였으며, 2025년에는 CBD 시장 규모가 15억 달러 이상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 2018년 컨슈머 리포트(Consumer Reports) 조사에 의하면, 미국 성인의 약 25%인 6,000만 명 이상이 CBD 제품을 사용해 본 적이 있으며, CBD 제품이 통증, 불안, 기타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미국의 식품 및 식이 보충제 제조업체들은 CBD 제품 산업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주정부의 CBD 제품에 대한 각기 다른 시행 지침과 식품의약국의 식품 및 식이보충제의 주간 판매 허용 규제 결여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2) 미국은 2018년 12월 농업법 개정을 통해 THC(Tetrahydrocannabinol) 함량이 0.3% 미만인 햄프에서 추출된 CBD(Hemp-derived Cannabidiol) 사용을 합법화함.

미국의 식량·농업 정책 전망

- 식품의약국은 현재 CBD가 소아 뇌전증(childhood epilepsy)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인 페디오렉스(Prediolex)의 활성성분으로만 승인되었기 때문에 의료 목적 이외에는 판매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CBD 식품 및 식이보충제 사용을 규제하는 시행 지침을 제정하는 데에는 서두르지 않고 있음.

- 한편, 미국 콜로라도, 메인, 오레곤주를 포함한 일부 주정부에서는 CBD를 식품 및 보충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법화했으며, 그 외 주정부는 연방 관리기관인 식품의약국의 지침을 따르고 있어 의료용 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식품의약국의 공식 입장은 CBD를 식품 및 식이보충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려면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에 따른 예외 규정을 제정해야 하고, 예외 규정을 제정하기 전에는 충분한 실험 및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하지만 일부 비판론자들은 CBD 제품 호황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국이 CBD 식품과 식이보충제 판매에 대한 시행 지침을 현재까지 제정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에게 관련 제품 사용에 대한 위험성을 높이고, CBD 제조업체의 애로사항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함.

■ 식품의약국은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CBD 식품과 식이보충제에 대한 안정성 여부를 입증하지 못한 채 CBD 제조업체들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시판하는 것에 대해 경고 및 판매 중지 서한을 보내고 있는 상황임.

- 미국 식품소매업자들은 어떤 CBD 제품이 합법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판매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CBD 제품의 라벨 부착 기준과 표준 품질에 대한 확신조차 없어 혼란을 겪고 있음.

■ 식품의약국은 미국 의회의 압력으로 CBD 식품과 식이보충제의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방안 등을 더욱 신속하게 제정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식품 및 식이보충제 제조업체들도 CBD 보충제에 대한 명확한 시행 지침 마련을 위해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 개정을 의회에 촉구하고 있음.

- 미국 의회가 2019년 12월에 승인한 식품의약국의 지출법안(spending bill)에는 햄프에서 추출된 CBD에 대한 연구와 비심리 대마초 성분을 포함한 식품과 식이보충제에 대한 재량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200만 달러의 예산을 포함하였음.

- 식품의약국은 지출법안이 제정된 지 60일 이내에 CDB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행지침을 제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입수하고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상·하원 세출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미국의 식량·농업 정책 전망

■ 하지만 식품의약국은 CBD 관련 제품들이 아직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연구 및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를 무시하고 CBD 제품에 대한 시행 지침을 수립할 경우 소비자에게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함.

- 식품의약국은 끊임없이 시판되고 있는 CBD 제품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 및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안전성과 규제를 지속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밝힘.

- 전문가들도 식품의약국이 CBD 제품의 안전을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기 못한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의 시행 지침 제정 압박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3 영양성분표시 라벨(Nutrition facts label)

■ 미국 식품의약국은 2016년 5월 자국민의 건강한 식습관을 돕기 위해 식품 및 건강보조식품에 영양성분표시 라벨(Nutrition facts label)을 개정하는 내용을 발표함. 이는 2018년부터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식품제조업체들의 철저한 준비를 위해 2020년 1월로 연장하여 추진하기로 함.

-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식품 및 건강보조업체들은 새로운 영양성분표시를 개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타 지역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입되는 품목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연간 판매실적이 1,000만 달러 이상인 업체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신규 영양성분표시 규제를 적용받으며, 1,000만 달러 미만인 업체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받음.

■ 2020년부터 시행되는 신규 영양성분표시 개정안에는 식품 1회 제공량 및 칼로리 표기 강화, 지방(fat)에서 발생하는 칼로리 표기 제외, 첨가당(added sugar), 비타민 D, 칼륨 함유량 추가 표기, 각주 하단에 새로운 표기 기준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1회 식품 제공량 및 칼로리 표기는 기존 보다 더 크고 진한 글씨체를 사용해야 하고, 설탕과 같은 첨가당(added sugar)은 함유량 및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추가로 표기해야 함.

- 또한, 기존 필수 표기 성분인 칼슘과 철분뿐만 아니라 비타민 D와 칼륨의 실제 함유량 및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기해야 하고, 영양 권장량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주 하단에 신규로 표기해야 함.

■ 식품의약국은 새롭게 개정된 영양성분표시 라벨에 대한 준수기한을 2020년 7월로 연장한다고 밝혔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개정된 라벨링 규정을 규제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이슈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음.

미국의 식량·농업 정책 전망

■ 첫 번째 이슈는 식품의약국이 난소화성 탄수화물, 곤약가루, D-타가도스, 글루코만난, 아라비노갈락탄 등의 영양소를 식이섬유(fibers)로 인정하여 신규 영양성분표시 라벨에 표기할지의 여부임.

- 신규 영양성분표시 라벨 최종규칙에는 식물에는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단독 또는 합성'된 탄수화물 중 식품의약국이 인체에 이롭다고 간주할 경우에만 식이섬유로 인정하고 있음.

- 식품의약국은 7개의 합성 식이섬유가 신규 영양성분표 라벨 최종규칙에서의 식이섬유 정의에 충족되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며, 국민 청원에서 요청한 영양소 등도 합성 식이섬유로 인정할지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음.

- 하지만, 식품의약국은 6개의 추가적인 합성 식이섬유 인정 청원에 대해 아직까지 응답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이로 인해 많은 식품 제조업체에게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음.

■ 두 번째 이슈는 식품의약국이 신규 영양성분표시 라벨 개정에서 저칼로리 감미료인 'D-타가도스(D-Tagatose)'를 첨가당으로 분류하여 표기하는 것을 면제해줄 것인지의 여부임.

- 버지니아주의 식품업체인 보누모세(Bonumose)는 D-Tagatose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첨가당으로 분류하여 표기할 경우 소비자에게 잠재적인 건강 편익을 잘못 전달할 수도 있다고 주장함.

- 식품의약국은 지난 4월 영양성분표시 라벨 최종규칙에서 알룰로오스(allulose)를 첨가당 분류에서 제외하였고, 저칼로리 설탕 대체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식품제조업체들이 건강한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D-Tagatose 또한 첨가당 분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세 번째 이슈는 2020년에는 식품의약국은 식품 및 음료에 첨가당 사용을 제한하고, 전체 곡물 함량에 대한 요구사항을 설정하는 등 '건강한(healthy)'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식품의약국은 지난 8월 '건강한(healthy)'에 대한 정의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예산관리국(OMB)에 제출하였으며, 이를 지지하는 옹호자 및 식품업계 모두 이미 개선사항에 대해 기대하고 있음.

- 한편, 공공과학센터(CSPI)는 식품의약국이 '건강한(healthy)'이라고 표시된 포장식품이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신선 과일 및 채소와 경쟁하지 않도록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함.

■ 마지막으로 2020년 영양성분표시 라벨 개정에서 식물성 유제품들을 동물성 유제품 용어에 포함할지 여부가 식품의약국에서는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임.

- 식품의약국에서는 소비자들이 식물성 유제품(예: 아몬드 밀크, 두유 등)과 전통적인 동물성 유제품의

영양적 차이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정보요청서를 발표하였고, 1만 3,000건의 라벨링 솔루션 제안을 포함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임.

- 식품 기술의 진보와 식물성 유제품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식물성 아이스크림, 버터, 마가린, 마요네즈, 고기 등 다양한 신제품이 등장하였고, 심지어 콜리플라워라이스와 같이 쌀을 함유하지 않은 쌀 모양의 음식까지 출시되어 이러한 제품에 대한 명확한 영양성분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참고문헌

IEG Policy. 2020. Food & Agriculture Outlook 2020. “US FOOD POLICY”, “US AGRICULTURE POLICY”. IEG Policy.

OECD 녹색회복을 향한 기후전문가 논의 동향[1)]

1 개요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IEA(국제에너지기구)와 공동으로 기후전문가그룹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여 지속가능한 녹색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구성 요소를 논의하고, 각국의 사례들을 공유함.

■ 코로나19로 인해 화석연료 수요 및 소비가 상당히 감소되었으나 복귀과정에서 수요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회복 과정에서 저탄소 발전전략의 수립,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NDC)와의 연계 하에서 일자리 창출 및 업무 패턴 변경 공공사업 수행 시 기후요소(탄소배출 등) 고려 금융시스템 개편 디지털 기술 확대 등 사회 전반의 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함.

2 지속가능한 녹색회복(Green Recovery)을 위한 구성요소

■ OECD는 코로나19로 인해 단기적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임을 언급하면서 지속가능한 녹색회복을 위한 통합적 접근과 정책적 시그널을 강조함.

- **(경제성장률)**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G20 국가의 경우 국제교역 규모도 급락할 것으로 예상됨.

- **(지구 환경의 변화)** 경제 침체 및 이동제한으로 온실가스 배출량도 급감하였으나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는 역대 최고치인 417ppm에 도달하였고, 생물종 멸종위기도 1천만 년 평균보다 10~100배 높아져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위기 반복 우려가 있음.

- **(정책적 대응)** 보건 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2)]은 경제적 충격[3)]을 야기하고 유동성 위기로 이어짐에 따라 정부 및 중앙은행 등은 소득 보전, 긴급 지원금 제공 등의 재정 및 통화 부양책 마련이 필요함.

---

1)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OECD 녹색회복(Green Recovery)을 향한 기후전문가 그룹 논의 동향"(출처: Climate Change Expert Group(CCXG) Global Forum on the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2020.6.2., 6.4.)(2020.8.3.)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함.
2) 이동제한 및 격리 등
3) 실업률 증가, 소득 감소, 물가에의 영향 등

OECD 녹색회복을 향한 기후전문가 논의 동향

- **(장기발전전략과 NDC)** 장기 기후완화 전략[4]은 각국이 저배출 개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장기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여 경제 전체가 전환하도록 하는 기회를 의미하며, 의무적 수립 이행 과정과 자발적 장기 전략 간 연계성 강화가 필요함.

- **(통합적 접근)** 저배출 전략을 소득 일자리 등 다른 부문의 사회경제적 목표와 연계하여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well-bing" 접근법이 기후행동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됨.

- **(제언)** △정책적으로 코로나19 회복책에 기후행동을 통합시켜 COP26[5]에 앞서 NDC 강화, △공공 지출에 있어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및 탄소집약적 산업에 대한 조건부 지원, △투자 관련 탄소가격제 도입 및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그널 제공, △이동성에서 접근성(mobility to accessibility)으로의 전환 등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변화 유도 필요성을 강조함.

■ IEA는 코로나19가 전 세계 에너지 시장 및 이산화탄소(CO_2) 배출량에 미친 영향은 일시적인 것으로 평가하면서, 각국 정부는 회복책 마련 시 청정에너지 지원 및 투자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을 강조함.

- **(CO_2 배출량)**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전 세계 에너지 관련 CO_2 배출량이 8%가량 감소하여 7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 다만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등을 반추해 볼 때 이러한 감소세는 일시적인 것으로 위기 이후 크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됨.

- **(전력 수요)** 이동제한(Lock-down)에 기인하여 전력 수요는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특히 서비스 산업 중심의 일부 국가에서는 전력 수요가 20%나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수송부문)** 전례 없는 국내/국가 간 이동제한으로 육상수송 및 항공부문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으며, 수송부문이 전 세계 기름 수요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수요 하락의 주요인으로 확인됨.

- **(에너지 믹스)** 50년 만에 처음으로 2019년 에너지 믹스에서 저탄소 청정에너지 발전원이 석탄[6]을 넘어섰고, 이러한 추세는 2020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청정에너지 투자)** 유틸리티급(10MW 이상) 재생에너지 발전은 지속가능성 및 회복탄력성 측면에서 우수하나 전체 에너지 관련 투자의 40%에 못 미치고 있어 충분한 투자가 필요함.

- **(정부의 역할)** 풍력 및 태양광 프로젝트의 70%가량이 코로나19로 인한 향후 시장 상황 및 정책적

4)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는 파리협정 제4조 19항에 따른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T-LEDS), UNFCCC 외부에서는 여타의 장기 전략 또는 기후/탄소 중립 목표 등을 의미함.
5)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2020.11월 영국 개최 예정)
6) 석탄 수요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함.

OECD 녹색회복을 향한 기후전문가 논의 동향

결정 등으로 인해 불확실한 상태이며, 각국 정부는 회복책 마련 시 청정에너지 지원 및 투자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함.

■ 세계은행(WB)은 코로나19 지원 상황을 공유하면서, 각국 정부가 마련하는 회복책은 지속가능한 회복으로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함.

- **(지원 현황)** 100개 이상의 국가의 회복 지원을 위해 14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진행 중임.
- **(재정지원 수단)** 각국의 긴급 상황을 감안하여 기존의 자본집약적 사업에서 보다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유연성을 발휘하되, 특정조건을 제시하여 지속가능한 회복을 달성하도록 유도할 예정임.
- **(정책 제언)** 각국이 대규모의 재원을 동원하여 경제 회복책을 마련하는 만큼 지속가능한 회복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경제회복 개입을 평가하기 위한 지속가능성 체크리스트(Proposed Sustainbility Checklist for Assessing Economic Recovery Interventions)[7]"를 제안함.

■ EU집행위원회(EC)는 2020년 5월 말 발표한 코로나19 회복 방향을 공유함.

- **(배경)** 코로나19 회복책 마련에 있어 고용·기업·유동성 문제 등을 대응하기 위한 즉각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핵심 비전으로 '다음세대를 위한 준비(preparing for the next generation)'를 설정[8]하고 지역 및 세대 간 연대를 중심에 둘 예정임.
- **(규모)** 향후 EU 회원국들은 10조 유로[9] 규모의 경제재건을 위한 재정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며, 회원국 GNI의 1.2~2% 규모의 재정지원(융자 등) 실시할 예정임.
- **(주안 사항)** 향후 5년간 실시될 코로나19 회복 계획에 있어 저탄소 기술[10]에의 투자를 최우선시할 예정이며, 일자리 창출 및 성장, 사회 및 환경의 회복탄력성 제고에 초점을 맞출 예정임.

■ **[영국 기후변화위원회(CCC), Julia King Baroness Brown]** 코로나19 회복책은 탄소중립(net-zero) 전환을 촉진해야 함을 강조하며, 영국의 탄력적 회복을 위해 필요한 6대 원칙을 설명함.

- **(기후투자 활용)** CCC가 기존 연구를 통해 식별한 노동집약적 기후 관련 상세 투자 부문을 활용하여

7) (단기적 고려사항) 고용 및 경제 활동에의 영향, 일정 및 위험성 평가를 위한 10개 문항, (장기적 고려사항) 인적 및 사회적 자본·기술·자연 및 문화적 자본물리적 자본·시장 실패에의 영향, 회복탄력성 및 적응역량 제고, 탈탄소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 장기적 위험성 평가를 위한 24개 문항으로 구성함.
8) 코로나19 회복을 위해 실시되는 투자 및 사업이 다음 세대의 편익을 위해하거나 부담되지 않도록 함.
9) EU 집행위원회 공식자료에 따르면, 7,500억 유로(약 1,023조 원)
10) 건물 리노베이션, 청정에너지 기술, 저탄소 차량 등임.

OECD 녹색회복을 향한 기후전문가 논의 동향

공적 재원 및 민간과의 공동재원 조성을 통한 시의적절한 부양책 마련이 필요함.

- **(긍정적 장기행동으로의 전환 유도)** 코로나19 위기는 '이동(travel)'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규범을 이끌어 내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잠재력을 일깨우며, 재택근무 및 원격진료 확산을 위한 인프라 및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장기적 행동의 전환 유도가 가능함.

- **(기후변화에 관한 회복탄력성 손실 대응)** 코로나19는 우리가 직면한 주요 위험에 대한 증거에 기반한 준비를 해야 함을 강조, 기후변화에 따른 파괴 위험에 대한 취약성을 낮추고 탄소중립으로의 무질서한 전환을 방지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정책이 필요함.

- **(공정성을 핵심 원칙으로 설정)** 코로나19는 기존의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많은 부문과 지역의 고용에 새로운 위험을 초래한 바 정책적 비용과 편익의 공정한 분배를 우선시해야 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편익은 공유되어야 하고, 현재의 위기로 상실된 일자리를 새로운 회복 탄력적 경제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로 대체되어야 함.

- **(회복책이 배출량 또는 기후위험을 'lock-in'하지 않도록 담보)** 일자리 및 산업 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시 탄소집약적 부문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제적·지속적 행동을 담보[11] 받고 기후변화에 회복탄력적이 되도록 신규 투자를 실시함.

- **(배출량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조세 정책은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으로 촉진할 수 있으며, 영국의 많은 부문이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전체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세 제도 개편, 가격하한제(floor price) 등 적정가격에 기반한 탄소가격제 강화를 통해 외부 충격을 내재화할 필요가 있음.

■ **[중국 에너지재단, Yue Dong]** 중국의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및 향후 대응 방향 등을 공유함.

- **(경제 영향)**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1분기 중국의 GDP가 6.8%가량 하락했으며, 안정세가 나타난 3월 이후 경제활동이 재개되었으나 글로벌 수요가 회복되지 않아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

- **(정부 대응현황[12])** 고용·빈곤 경감·소비 회복 등 경제회복을 최우선시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신인프라, 신도시화, 철도 등 대형프로젝트, 환경보호, 에너지 안보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에너지 재단의 활동)** 코로나19 위기를 녹색전환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 △녹색경제 부양책,

11) 프랑스 정부가 에어프랑스 긴급지원 시 국내 노선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4년까지 2005년의 50% 수준으로 감축할 것 등 기후친화적 조건을 담보 받은 것을 우수사례로 언급함.
12) 중국 정부가 전국인민대표대회(NPC)에 제출한 보고서 자료를 인용했음을 언급함.

OECD 녹색회복을 향한 기후전문가 논의 동향

△녹색 일자리 및 기술 촉진, △경제 및 환경 영향 평가(제14차 5개년 계획), △환경적 안전장치 마련, △부문 개편, △저탄소 전환을 위한 높은 수준의 목표 설정 등을 포함한 특별 프로그램 마련 중임을 설명함.

■ [케나다. Mark Radely] 캐나다 정부의 환경 및 기후변화 수석경제학자인 Radely는 캐나다의 코로나19 회복책 마련 사례에 대해 설명함.

- (노동자 및 산업계 지원) 임금 보조 등을 위해 1,45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지원을 실시했으며, 산업계 지원을 위한 대출 등 유동성 회복 방안 채권 매입 등을 통한 재정지원 실시 등 사례를 소개함.

- (단기적 조치) 우선적인 조치 수단 마련을 위한 '그린 렌즈' 개발 및 그린워싱[13] 방지책을 마련하고, 특히 조건부 지원 및 규제의 역할 강화 도모 중임.

- (장기적 조치) 노동자가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름 및 가스 분야의 메탄 관리를 위한 투자를 실시, 지원 수혜기업이 대규모 사업장일 경우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TCFD)' 참여를 통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할 예정임.

■ [NDC 파트너십, Pablo Vieira] 54개 개도국, 48개 환경부 및 32개 재무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책 마련에 있어 NDC 이행과의 연계성에 대해 발제함.

- (설문조사 주요 결과)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재원 소요로 기후 관련 지출 감소, △NDC 목표 상향은 동력 상실 위기에 봉착, △경기부양책 마련 시 NDC 포함할 것에는 원칙적 동의, △기술지원 시급, △다른 나라 사례로부터 학습 희망의 5대 결과를 도출함.

- (NDC 연계 사례) △보건 관련 기후와의 상호 편익 통합(요르단 및 나이지리아). △재건 계획에 에너지 전환 포함(레바논), △에너지-보건-기후의 연계에 초점을 맞춘 통합적 접근(자메이카) 등 각국 사례를 소개함.

- (기술지원 요청 분야) 기후목표 상향에 대한 코로나19의 거시적 영향 분석(66%), NDC 수정을 위한 비용 조정(54%), 경기부양책의 녹색성장 촉진 방안 평가(51%) 등에 대한 개도국의 지원 요청을 확인함.

■ [유럽 경제환경연구소, Valentina Bosetti] 기후정책에 있어 코로나19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함.

13) greenwashing: 친환경적 특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내보이는 행위임.

OECD 녹색회복을 향한 기후전문가 논의 동향

- **(경기회복 전망)** 2~3년 내 회복(26%), 4~5년 내 회복(12%), 5년 이상 소요(9%), 1년 이내(3%) 순으로 응답함.

- **(기후정책에 미치는 영향)** 기후정책에 대한 공공 지출에 대해 약간 증가(24%) 및 적정 수준으로 증가(20%)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후 관련 국제협력은 현상유지(34%) 및 약간 증가(24%)할 것으로 전망됨.

- **(기후정책 지원 분야)** 공적 부문에 대한 지원은 약간 증가(42%) 또는 적정 수준으로 증가(14%)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업에 대한 지원은 약간 증가(25%) 또는 상당 수준으로 증가(25%)할 것으로 예측함.

- **(재생에너지 지원)**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은 적정 수준으로 증가(32%) 및 약간 증가(28%)할 것으로 예측되며, 청정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약간 증가(32%), 적정수준으로 증가(30%) 및 상당 수준으로 증가(16%)할 것으로 전망됨.

- **(화석연료 관련 정책)** 탄소세 확대에 대해 현상 유지(40%) 또는 약간 증가(16%)가 예측되며, 석탄 철폐는 현상 유지(40%), 약간 증가(18%), 적정 수준으로 증가(16%) 및 상당 수준으로 증가(14%)로 다양한 응답이 도출됨.

- **(탄소집약적 산업에 대한 긴급지원 가능성)** 탄소집약적 발전사 및 산업에 대한 지원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 응답이 다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항공사에 대한 긴급지원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8.10.).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IU 10대 글로벌 리스크[1)]

■ The Economist 산하 연구기관인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는 2020년 7월 15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 우려', '코로나19 대응이 국가 부도로 연결될 위험' 등 10대 글로벌 리스크를 선정함.

- 코로나19와 관련된 신규 항목이 10대 리스크 중 7개를 차지하였으며, 최고 수준의 위험 강도[2)]를 보이는 항목이 2개를 차지하는 등 전년 대비 위험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향함.

| 10대 글로벌 리스크 |

순위	'19.7월 기준		'20.7월 기준	
	내용	강도	내용	강도
1	미-중 무역분쟁이 글로벌 무역 전쟁으로 변모할 가능성	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 우려 (신규)	25
2	대규모 美 기업부채에 따른 경기 둔화 증폭 우려	12	코로나19 대응이 국가 부도로 연결될 위험 (신규)	25
3	광범위한 신흥국 경제 위기 발생 가능성	12	미-중 무역분쟁에 의한 글로벌 경제 분열	20
4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	10	세계무역이 반세계주의 정책으로 회귀 (신규)	16
5	공급부족에 의한 글로벌 유가 급등	8	'21년까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실패 (신규)	12
6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따른 무력 충돌	8	예상보다 작은 코로나19 피해로 세계경제가 급반등 (신규)	10
7	사이버 공격에 따른 인터넷 기능 저하	6	걸프 긴장이 미-이란 충돌로 변형	9
8	정치적 교착상태에 따른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	6	공급망 붕괴로 '20~'21년 예측 불가능한 물가 급등 발생 (신규)	9
9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	5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로 권위주의 강화 (신규)	8
10	이탈리아의 정치·금융 불안정으로 인한 은행 위기	4	사이버 공격에 따른 인터넷 기능 저하	6

1) KDB 산업은행 미래전략연구소에서 발간한 "10대 글로벌 리스크"(2020.7.27.)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작성함.
2) 강도란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을 종합한 리스크 강도를 의미하며 최고점은 25점임.

EIU 10대 글로벌 리스크

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 우려: 발생가능성 Very High, 영향력 Very High

■ EIU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충격이 2020년 상반기에 집중되고, 연중반부터는 봉쇄조치가 점진적으로 완화되며, 부분적인 경제회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함.

■ 그러나 EIU는 이 같은 전망에 2가지 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함.

- 첫 번째는 치료된 환자의 면역 생성 미흡, 2·3차 확산 발생 등으로 2020년 연중 바이러스가 통제되지 않는 것임.

- 두 번째는 코로나19 확산과 상관없는 것으로, 노동시장이 반등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여행과 비필수재 수요가 감소된 수준을 유지하는 것임.

- 이 경우 글로벌 서비스 부문의 수입 감소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기업 부도 발생, 실업 유발로 연결될 수 있다고 언급함.

■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경기침체가 2021년까지 연장되고, 디플레이션 악순환[3]에서 빠져나오는데 수년이 걸릴 수 있음.

2 코로나19 대응이 국가 부도로 연결될 위험: 발생가능성 Very High, 영향력 Very High

■ 코로나19 관련 공포와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안전자산인 달러화로 자본이동이 발생하여, 신흥국 통화가치가 이미 하락함.

- 기존에 대규모 달러화 표시 부채가 있으며, 향후 경기 악화 방지를 위해 추가 차입이 필요한 국가에서는, 통화가치의 하락이 심화될 경우 국가 부도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특히 경기 부양, 급증한 의료비 조달과 부채상환에서 트레이드 오프(trade-off)가 발생하는 국가들이 위와 같은 상황을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 신흥국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된 가운데 한 국가에서 부도가 발생할 경우 다른 국가로 전이될 수 있으며, 투자자금 유출의 가속화 요인으로 작용 가능함.

3) 디플레이션 악순환(deflation spiral): 물가하락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어 물가하락이 추가적으로 심화되는 현상임.

EIU 10대 글로벌 리스크

- EIU는 낮은 성장률과 쌍둥이 적자를 보이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재정 불안과 대외부채 부담이 있는 이탈리아에 대해 위험이 높다고 언급함.

3 미-중 무역분쟁에 의한 글로벌 경제 분열: 발생가능성 Very High, 영향력 High

■ 2020년 1월의 미-중 1차 무역합의와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여력 소진에도 불구하고, 기술 부문에서의 전략적 경쟁으로 인해 미-중 무역갈등이 고조될 위험이 있음.

- 미국의 코로나19 중국책임론 제기, 중국의 지정학적 관계 구축을 위한 구호물자 제공 등에 의해 코로나19가 양국 간 긴장이 제고될 수 있음. 또한, 중립적 입장을 취하지 못하도록 미-중 양국이 제3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음.

■ 세계 경제가 점진적으로 양분되는 것은 초기에는 느리게 진행될 것이나 장기적 영향은 클 것임.

- 다국적 기업은 공급망을 재정비하여야 하고, 미-중간 분열된 무역 블록이 높은 정치적 긴장에 직면할 수 있음.

4 세계무역이 반세계주의 정책으로 회귀: 발생가능성 High, 영향력 High

■ 코로나19 이후 국가주의적이고 반세계주의적인 정책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며, 상품 및 사람의 이동에 대한 국경통제가 더욱 엄격해지는 추세임.

- 서유럽, 아시아의 비즈니스 중심지 등 개방적인 국가들조차도 세계화에 반하는 정책을 도입함.

■ EIU는 경제에 관한 국가주의의 부상으로 국제 교역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반세계화 흐름의 경고 신호로 두 가지를 언급함.

- 첫 번째, 국내 공급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을 금지하고, 미래에 발생할 위험에 대비하여 재고를 축적하는 것, 이러한 움직임은 원활한 교역 흐름을 방해하고 기업들이 공급망과 시장을 국내화 하는데 집중하게 할 것으로 전망됨.

- 두 번째, 식량, 의약품 등의 국내 생산 및 자급자족 증대와 해외조달 불안 경감을 위해 정부가 투자 및 관-민 파트너십을 발표하는 것임.

EIU 10대 글로벌 리스크

5 2021년까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실패: 발생가능성 High, 영향력 Moderate

■ 글로벌 경제가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백신 개발과 배포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상황을 감안할 때 2021년 말에나 배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백신 배포 이후에야 여행 제한 및 봉쇄의 영구적인 종료가 가능함.

■ 그러나 백신의 전 세계적 배포가 어렵고, 복잡한 데다가 백신 개발의 성공 여부 역시 확실하지 않아 글로벌 경제의 회복에 대한 하방 위험이 존재함.

■ 이러한 시나리오 하에서, 바이러스 이전 시기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 산발적인 감염을 막기 위한 여행 제한, 접촉자 추적이 지속될 전망임.

- 또한 지속되는 불확실성에 대한 위기대응 계획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글로벌 투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예상됨.

6 예상보다 작은 코로나19 피해로 세계경제가 급반등: 발생가능성 Low, 영향력 Very high

■ 다음의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경우 코로나19의 세계경제에 대한 충격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음.

- 첫째, 광범위한 검사를 통하여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을 겪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임.

- 둘째, SARS의 경험을 토대로 신속한 백신개발 절차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예상보다 빨리 백신이 개발되는 것임.

- 셋째, 성공적인 백신의 개발로 여행 제한과 봉쇄가 완화되어 여행, 숙박 등 서비스업 부문의 빠른 반등이 나타나는 것임.

■ 이 경우 글로벌 경기침체는 2020년 상반기로 제한되고 장기적인 부정적 효과가 적을 전망임.

EIU 10대 글로벌 리스크

7 걸프 긴장이 미-이란 충돌로 변형: 발생가능성 Moderate, 영향력 Moderate

■ 2020년 1월 미국의 이란 사령관 암살[4]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었으며, EIU는 양국의 갈등이 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유가 하락,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이란 경제가 충격을 받은 가운데 현 정권이 성난 민심을 미국에 대한 적개심으로 단결시키기 위하여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 군사적 충돌은 중동지역에 위치한 미국 우방국과 대치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대응하여 대외적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도 있음.

■ EIU는 세계 원유 교역량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걸프 지역(특히 이란이 통제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수송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이 지역에 대한 투자가 급감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함.

8 공급망 붕괴로 2020~2021년 예측불가능한 물가 급등 발생: 발생가능성 Moderate, 영향력 Moderate

■ 코로나19의 영향이 세계 전반에 미침에 따라 위생용품과 식품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크게 넘어서는 등 2020년 내내 공급망 붕괴가 발생할 수 있음.

- 2020년 말에 일부 국가에서 바이러스가 통제되어도 다른 국가에서는 여전히 통제되지 않을 위험이 존재함.

■ 의료시스템이 취약한 개발도상국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될 경우, 많은 나라에서 이동 및 여행 제한 조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바이러스 확산 국가의 수요 급증(위생용품 등)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정책의 불일치로 인하여 관련된 공급망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을 우려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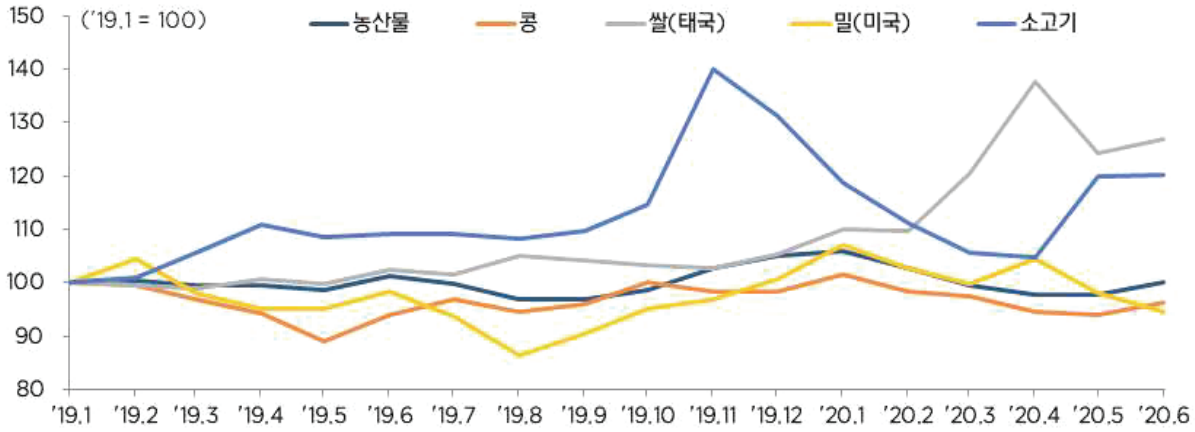
■ 2020~2021년에 걸쳐 예상치 못한 물가 급등 발생 시 기업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식품이나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이 특징인 전자제품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음.

4) 2020.1.3일 미국의 바그다드 공습으로 이란 혁명수비대의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사망함.

EIU 10대 글로벌 리스크

| 최근 국제 농산물 가격 추이 |



자료: World Bank Commodity Price Data.

9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로 권위주의 강화: 발생가능성 high, 영향력 Low

■ 코로나19 확산으로 엄격한 봉쇄정책이 펼쳐지고 정부의 통제가 강화됨.

- 권위주의가 상대적으로 약한 서구권 국가와 비교할 때 중국은 여행 제한과 감염 추적을 통한 바이러스 확산 제한에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함.

■ 브라질, 인도, 터키 등과 같이 권위주의적 행보를 보여준 국가의 지도자들이 사회·경제적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장기화할 위험이 존재함.

- 바이러스 확산이 진정됨에도 불구하고 사람에 대한 추적을 유지하는 것이 권위주의 강화의 핵심적인 지표가 될 전망, 이때, 바이러스 통제를 명목으로 반대파와 미디어를 억압할 가능성이 있음.

■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이 국내·외 적들과 긴장을 유발하여 국가 내부의 단결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의 불확실성 확대와 준수비용(compliance costs) 증가, 창의성 고갈, 그리고 지정학적 충돌에 따른 위험 확대 가능성이 있음.

10 사이버 공격에 따른 인터넷 기능 저하: 발생가능성 Moderate, 영향력 Low

■ 사이버 공격은 가해자 식별이 어려운 반면, 낮은 비용으로 큰 잠재적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간 갈등을 표출하는 방식으로서 선호도가 증가함.

EIU 10대 글로벌 리스크

■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생 이후 우위를 점하기 위한 국가들의 지정학적 경쟁이 치열해져 미국과 같은 대규모 경제권의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위험이 증가함.

- 미국과 중국 또는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 간 긴장이 고조[5]되는 것이 가장 인지하기 쉬운 위험 신호임.

■ 코로나19가 대부분의 주요국 경제 침체를 유발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전국 송전선망 또는 인터넷망의 일시적인 정지에도 경제적 피해 및 의료적 구호 노력이 악화될 위험이 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8.18.).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 국가의 중요한 인프라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연속적인 공격을 하는 형태로 나타나 해당 국가의 성장과 신뢰도를 저해할 수 있음.

국제 농업 정보 I (2020. 8.): 코로나19 관련 농업·농촌·식품 동향

미국

1 코로나19 대응 식품 꾸러미 사업[1)]

■ 미국 농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의 먹거리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식품 꾸러미(Food Box)를 배송하는 사업을 실시함.

- 2020년 4월 17일에 발표된 코로나19 대응 식품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됨.
- 취약계층 식품 꾸러미 사업(Farmers to Families Food Boxes)은 취약계층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동시에 미국 농업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함.
- 1차 배송을 통하여 2020년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3,560만 개의 식품 꾸러미(약 12억 달러 규모)를 전달하였으며, 2차 기간인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4억 7,000만 달러 규모의 꾸러미를 추가로 배송하는 중임.

■ 식품 꾸러미 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국 내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을 공급하는 형태로 진행됨.

- **(대상자)** 사업의 대상인 취약계층[2)]은 소득 및 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식품 공급이나 섭취에 방해를 받은 사람들을 의미함.
- **(배송방식)** 농무부 마케팅지원청에서 식당, 호텔 등의 영업 중지로 인하여 일자리를 위협받는 전국 및 지역의 식품 배송업자들과 파트너십을 맺어 분배 중심지 혹은 대상자들에게 직접 전달함.
- **(지역구분)** 배송은 미국 전체를 7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사업이 이루어지며, 여러 지역을 동시에 배송하는 업체들도 존재함.
- **(제한사항)** △미국 내에서 생산된 농축산물로 식품 꾸러미에 들어갈 상품을 채워야 하며, △보존제, 안정제 등 허용되지 않은 식품 첨가제 사용이 금지됨.

1) 미국 농무부에서 발표한 "USDA Farmers to Families Food Box"(2020.8.11.), "Farmers to Families Food Box: Basic Ordering Agreement Solicitation"(2020)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2) 미국 농무부 경제조사국(USDA ERS)에서 제공하는 최신 자료(2018년)에 따르면 미국 내 식품 안전성 취약계층이 약 11.1%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국제 농업 정보 I (2020. 8.): 코로나19 관련 농업·농촌·식품 동향

■ 식품 꾸러미는 한 가족이 섭취할 수 있는 분량의 신선 과일 및 채소, 유제품 그리고 육류와 계란 등을 반드시 모두 포함해야 함.

- **(전체분량)** 총 30~40파운드 무게의 한 가정이 섭취할 수 있는 분량의 식품을 포함하며, 신선 과일 및 채소와 반조리 된 육류를 모두 포함하는 꾸러미(Combination Box)로 구성되어야 함.
- **(신선 과일 및 채소)** 10~12파운드 분량의 상대적으로 보관 기간이 긴 뿌리채소(감자, 얌, 당근, 양파 등)와 과일(핵과류, 사과, 멜론 등)로 구성되어야 하며, 1~2개의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육류와 계란)** 5~6파운드의 반조리 된 냉장 혹은 냉동 보관이 가능한 육류 가공품 2가지를 포함해야 함.
- **(유제품)** 5~6파운드의 치즈, 버터, 요거트, 사워크림 등을 포함해야 함.
- **(기타)** 식품 꾸러미 내에는 식품뿐만이 아니라, 영양분 표시, 알레르기 주의 표시, 추적을 위한 코드, 식품 조리 방법 등 품질 관리 및 정보 제공을 위한 부가적인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08.18.).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럽

1 코로나19 발병 이후 EU의 농식품 무역[3)]

■ 2020년 7월 3일 발표한 2020년 1분기 EU 무역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2월 중국발 코로나19 발병 이후 세계 경제는 긴 침체에 빠졌지만, 2020년 초기에 EU의 농식품 무역은 안정세를 보임. EU의 전체 교역액은 2019년 동기대비 4.7% 증가한 786억 유로로 나타남.

■ **[전체수출]** 2020년 1분기 EU의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6.2% 증가한 468억 유로를 기록함.

3) EU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MONITORING EU AGRI-FOOD TRADE: DEVELOPMENTS JANUARY-MARCH 2020"(2020.7.3.)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국제 농업 정보 I (2020. 8.): 코로나19 관련 농업·농촌·식품 동향

| 연도별 EU 농식품 수출액 |

단위: 백만 유로

- **(국가별 수출 증가)** EU의 농식품 수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중국이며,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수출이 촉진되어 전년 대비 11억3,600만 유로 증가함. 이외에 사우디아라비아, 모로코, 러시아, 미국 순으로 수출이 증가함.

- **(국가별 수출 감소)** EU의 농식품 수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영국으로 2020년 1월 브렉시트 단행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 대비 8억 2,700만 유로 감소함. 이외에 홍콩, 레바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순으로 수출이 감소함.

■ **[수입]** 2020년 1분기 EU의 농식품 수입액은 전년 동기보다 2.6% 증가한 318억 유로로 나타남.

| 연도별 EU 농식품 수입액 |

단위: 백만 유로

국제 농업 정보 I (2020. 8.): 코로나19 관련 농업·농촌·식품 동향

- **(국가별 수입 증가)** EU의 농식품 수입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캐나다임. 전년 대비 100% 넘는 3억 6,600만 유로가 증가하였으며, 이외에 인도네시아, 코트디부아르, 터키, 말레이시아 순으로 수입이 증가함.

- **(국가별 수입 감소)** 수출과 마찬가지로 EU의 농식품 수입이 가장 많이 감소한 국가는 영국이며, 특히 주류, 제과, 곡물류의 수입 감소가 두드러짐. 이외에 우크라이나, 미국, 호주, 인도 순으로 수입이 감소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07.27.).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코로나19 관련 계절근로자 보호 지침[4)]

■ EU의 농업 분야는 계절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큰 편이며, 매년 약 100만 명의 계절근로자가 국경을 초월해 EU에서 활동하지만, 작업의 일시성으로 인해 불안정한 근로와 함께 생활 여건이 취약함.

- 이에 코로나19가 계절근로자의 근로 안정성을 위협함에 따라 EU 집행위원회는 계절근로자를 위한 보호 지침을 발표함.

- **(평등한 대우)** 계절근로자는 국적에 상관없이 고용된 국가의 노동 관련 법률과 단체 협약에 적용을 받고, 보수, 해고, 산업 안전, 보건 등 근로 조건에 관하여 해당 국가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사회적·세금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음. 또한, 해당 회원국의 고용 서비스에 가입한다면, 비자발적 실업 시 6개월 동안 해당 국가의 노동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음.

- **(근로환경)** 계절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위한 20개 이상의 지침을 규정함. 고용주는 작업상의 위험에 대한 평가와 예방 및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고, 회원국은 고용주가 관련 법적 요구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원, 계절근로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생활환경)** 계절근로자의 주거와 운송에 관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번 지침은 계절 노동자에게 적정 수준의 주거지와 코로나19 관련 보건 및 안전 조치 기준을 만족하는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을 회원국에 요청함.

- **(사회보장)** 계절근로자는 사회 보장기여금 납부 등을 통해 해당 회원국의 국민과 동일한 사회 보장제도[5)]에 가입할 수 있음.

4) EU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Coronavirus: European Commission calls for action in protecting seasonal workers"(2020.7.16.)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5) 비EU 국가 계절 근로자는 체류의 일시성을 감안하여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및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조와 연구를 통해 계절근로자를 보호할 계획임.

- 회원국 간 계절근로자 관련 정보교류를 위한 상설 포럼을 개최하고, 유럽노동청(European Labour Authority; ELA)을 초청할 계획이며, 아울러 회원국의 제3국 계절근로자 보호 이행에 관한 평가를 진행 중임.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08.03.).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6)]

■ EU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여파에서 회복하기 위한 계획인 Recovery Plan for Europe을 발표함.

-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7월 17일부터 7월 20일까지 특별회의를 개최하여 2021~2027년까지의 다년간의 예산안을 확정함.

- 예산안의 규모는 약 1조 8243억 유로로, 2021~2024년에 추가적인 예산을 배정한 차세대 유럽연합[7)](Next Generation EU)이 포함됨.

■ 전체 예산 중 공동농업협정(Common Agricultural Policy) 예산은 2,399억 유로로 예산의 약 13%를 차지함.

- 농업, 해양 정책 및 환경과 기후변화 관련 정책 예산으로 3,563억 유로가 배정되었으며, 이 중 약 2,586억 유로는 직불금 및 시장 대응 예산임.

- 개정된 공동농업협정은 이전처럼 시장 대응과 직불금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Pillar Ⅰ과 지역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Pillar Ⅱ로 구성됨.

- 공동농업협정에는 최대 2,399억 유로의 예산이 배정되며, 공동농업협정 예산의 40%는 기후변화대응(Climate Action)에 사용될 것임.

■ Pillar Ⅰ은 직불금 제도와 매년 4억 5000만 유로 규모의 농산물 비축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됨.

6) EU 집행위원회에서 발표한 "Special meeting of the European Council(17, 18, 19, 20 and 21 July 2020) – Conclusions"(2020.7.21.)의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7) 차세대 유럽연합의 7,500억 유로 규모의 특별 예산은 3,900억 유로의 양여금과 3,600억 유로 규모의 대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국의 경제회복, 사적 투자 지원 및 새로운 건강관리 체계의 도입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것임.

국제 농업 정보 I (2020. 8.): 코로나19 관련 농업·농촌·식품 동향

-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직불금 제도[8]는 2022년은 최소 200유로/ha 수준, 2027년에는 최소 215유로/ha 수준으로 증가시킬 계획임.

- 시장 조절 및 안정화 그리고 농업 생산 및 농산물 분배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농산물 비축제도를 운영하며, 비축량 사용 시, 유럽 농업 보장 기금(European Agriculture Guarantee Fund)의 수익을 통하여 비축량을 유지함.

■ Pillar Ⅱ는 유럽 농촌 개발 기금(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을 통하여 운영되며, 총 778억 유로의 예산이 배정됨.

- 회원국 중 농업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농촌 개발에 많이 투자한 경우 등으로 Pillar Ⅰ의 예산이 더 필요한 경우 Pillar Ⅱ 예산 일부를 Pillar Ⅰ로 이전이 가능[9]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08.10.).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일본

1 코로나19에 의한 소비자 구매 행동 변화[10]

■ 2020년 7월 16일 디앤드엠[11]과 크로스로케이션[12]이 공동으로 코로나19 확대에 따른 소비자의 소비·의식 변화 조사[13] 결과를 발표하였음.

■ **[슈퍼마켓 이용 횟수 및 시간대 변화]** 코로나19 확산 후 일주일에 슈퍼마켓 이용 횟수는 3일에서 2일로 감소하였음. 또한, 평일 낮에 이용자 증가에 따라 저녁 시간대에는 상품이 품절되는 경우가 늘었음.

8)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본 소득 지원 제도(Basic Income Support for Sustainability)의 직불금 상한선은 100,000유로로 설정함.
9) 예산 이전 신청을 한 국가들은 벨기에, 독일,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키프로스, 몰타,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핀란드가 있음.
10) 일본 농업협동조합신문 「新型コロナウイルスによる購買・意識の変化を調査、来店回数減も購入単価増」(2020.7.20.)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11) D&M,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마케팅 조사 및 분석 기업을 의미함.
12) X-Locations Inc, 위치 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클라우드형 플랫폼 제공 기업을 말함.
13) 조사는 수도권(도쿄도, 가나가와현, 지바현, 사이타마현), 오사카부, 아이치현의 종합 슈퍼마켓 277점포에서 20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유효 샘플 수는 2,191건임.

국제 농업 정보 I (2020. 8.): 코로나19 관련 농업·농촌·식품 동향

■ **[지출 금액·상품 수]** 코로나19 감염 확대 후 슈퍼마켓에서 지출 금액대가 2,000~3,000엔에서 3,000~5,000엔으로 증가하였으며, 구매 상품 수도 10개에서 15개로 증가함.

■ **[소비자 방문 증감 요소]** 소비자 방문이 증가한 지점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높은 접근성, 다양한 상품을 한 번에 구매 가능, 다양한 식품으로 조사되었으며, 방문이 감소한 지점의 소비자 감소 요인으로는 매장 혼잡, 낮은 접근성,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상품 구매 변화]** 코로나19 확대 전후로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유제품 구매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저장성이 높은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음.

- 편의점에서는 도시락, 과자·디저트, 드러그 스토어[14](drugstore)에서는 유제품 및 물·음료, 온라인 쇼핑에서는 물·음료, 택배·배달 서비스(생협 등)는 신선식품 구매가 증가하였음.

■ **[소비자 구매처 변화]** 코로나19 확대 이후 인터넷 구매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편의점, 잡화 할인점 등의 이용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07.27.).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4) 의약품과 함께 식료품, 생활용품 등의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는 점포를 말함.

국제 농업 정보 II (2020. 8): 미국, 유럽,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미국 농업·농촌·식품 동향

1 미국 쇠고기 수출량 감소[1)]

■ [수출 감소] 2020년 5월 미국 쇠고기 수출은 전년보다 31% 감소한 1억 8,849만 파운드로 2009년 금융위기 이래 최저수준임.

- 멕시코는 2004년 2월 이후로 최저수준으로 떨어졌고, 그 뒤를 이어 일본과 한국 순으로 미국 쇠고기 수출량이 급감했으며,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주요 수입국들도 일제히 감소 추세로 전환했음.

| 주요 수입국 대미국 쇠고기 수입량 변화 |

단위: 백만 파운드

국가	2019년 5월	2020년 5월	변화분	국가	2019년 5월	2020년 5월	변화분
일본	77.23	57.23	-20.00	홍콩	17.85	21.60	3.75
멕시코	37.60	8.26	-29.34	대만	18.21	12.41	-5.80
한국	63.19	49.36	-13.83	베트남	2.14	1.39	-0.75
캐나다	25.75	21.21	-4.54	기타국가	30.37	17.04	-13.33
				총 수출량	272.33	188.49	-83.85

출처: USDA.

■ [감소 요인] 미국의 쇠고기 수출물량 감소와 국내 쇠고기 가격이 상승하면서 국제 쇠고기 시장에서 경쟁력이 낮아졌음.

- 멕시코는 자국 내 경기 악화와 화폐가치 하락으로 수입수요가 감소하였으며, 한국과 일본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미국 쇠고기 수입량이 크게 감소함.

■ [전망] 2분기 미국 쇠고기 수출량은 5,000만 파운드 감소한 6억 2,500만 파운드, 3분기 미국 쇠고기 수출량은 쇠고기 생산량 증가에 따른 쇠고기 수출물량 확보로 전년 대비 2% 낮은 7억 7,000만 파운드가 될 전망임.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07.27.).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미국 USDA "Livestock, Dairy, and Poultry Outlook"(2020.7.16.)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국제 농업 정보 II (2020. 8): 미국, 유럽,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2 미국·일본 쇠고기 무역협정[2)]

■ **[미국 쇠고기 수출]** 미국은 전 세계 쇠고기 생산량의 20%를 차지하고, 아시아 국가가 수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 2019년 기준 미국 쇠고기 총수출량에서 일본은 26.4%, 한국은 22.6%, 홍콩은 7.7%를 차지함.

■ **[일본 쇠고기 수입 정책]** 일본 쇠고기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세이프가드 정책이 존재함.

- 2020년 수입량이 전년 대비 117% 이상이 되면 세이프가드가 발동되어 관세율이 50%까지 상승함.

- 2018년 3월 31일 미국산 냉동 쇠고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가 발동되어 38.5%에서 50%로 관세율이 상승함.

■ **[쇠고기 무역협정]** 2019년 초 미국·일본 무역협정(USJTA)을 시작으로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관세율[3)]을 점진적으로 낮출 것을 합의함.

- 미국의 TPP 탈퇴로 쇠고기 수출경쟁국보다 관세가 높았지만 2019년 USJTA로 인해 미국의 대일본 쇠고기 관세율은 CPTPP 회원국의 관세율과 동일하게 하락함.

- USJTA 합의 하에 세이프가드 정책은 24만 2,000톤을 초과할 경우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며, 2020년도 쇠고기 수입량이 전년도 세이프가드 적용 물량을 초과할 경우 매년 수입 허용 물량을 1~2% 증가시킴.

■ **[전망]** 미국의 TPP 탈퇴로 아시아 시장 비중이 높은 미국 쇠고기 수출시장에 악영향을 미쳤지만, 최대 수입국인 일본과의 쇠고기 협상을 통해 미국 쇠고기 수출에 탄력을 받을 전망임.

- 미국 농무부(USDA)는 2020년 쇠고기 총 수출량은 전년 대비 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지만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미국 쇠고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 더 낮아질 수도 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08 .03.).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미국 Choices "The U.S.—Japan Trade Agreement: Will It Lead to Greener Pastures for U.S. beef?"(2020.7.)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3) (2018) 38.5% → (2020) 25.8% → (2033) 9%로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관세율 인하가 예상됨.

국제 농업 정보 II (2020. 8): 미국, 유럽,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3 미국 대선 후보 조 바이든 그린뉴딜 공약[4)]

■ 존케리 전 상원의원과 오카시오-코르테즈 미연방 하원의원이 선봉장으로 미국판 그린뉴딜을 이끌었으며,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Joseph Robinette Biden, Jr.)을 통해 그린뉴딜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함.

- 교통, 전기, 건축 등 분야별로 청정에너지 사용을 늘리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내용임.

■ [목표] 2050년까지 탄소배출 순 제로(0)를 목표로 한 공약을 내세움.

| 미국 대선 후보 조 바이든 그린뉴딜 주요 공약 |

- 4년간 2조 달러 규모의 클린에너지와 인프라 구축에 투자
- 2035년까지 발전소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을 모두 중단
- 4백만 건물과 2백만 가구에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지원
- 2030년까지 모든 건물에 탄소중립[5)](carbon neutrality)을 실현
- 5년 이내에 50억 개 태양전지판을 설치
- 청정 경전철 및 버스 시스템에 투자
-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08 .10.).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 미국 The New York Times "6 Takeaways From the Biden-Sanders Joint Task Force Proposals"(2020.7.9.) 내용을 바탕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5) 이산화탄소 배출이 아예 없거나, 생성되는 양과 저감되는 양이 같아 대기 중에 탄소를 추가로 더 생성시키지 않는 것을 의미함.

국제 농업 정보 II (2020. 8): 미국, 유럽,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유럽 농업·농촌·식품 동향

1 유럽투자은행의 농촌개발사업 현황[6)]

■ **[농촌개발사업 현황 및 계획]** 유럽투자은행은 코로나19 대응, 유럽연합의 경기부양책 및 그린딜(Green Deal)과 관련된 농촌개발사업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발표하였음.

- 회원국 인구 중, 28%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나 농촌은 △교육 인프라 부족, △취업 기회 부족, △낮은 공공 서비스 및 교통 접근성, △부족한 광대역 인터넷 접근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농촌개발사업 현황]**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바이오기반경제 및 순환경제에 대한 투자, △조림 및 현대적 인프라 설치, △중소규모업체에 대한 대출 및 투자로 구분이 가능함.

- 각 사업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그린딜 정책의 일환, △농촌생활환경 개선, △농촌 일자리 확보 등을 위한 사업들임.

- 최근 유럽연합의 농업 및 농촌 관련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융자 지원방법이 자급자족이 가능한 농촌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음.

■ **[기후변화대응]** 유럽투자은행은 바이오기술 기반 경제(bioeconomy)와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에 대한 투자 및 대출을 통하여 농촌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 및 지속가능성 확보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유럽투자은행이 투자하는 바이오기술 기반 경제 분야는 △기후회복력이 있는 생산기술(Climate-resilient production), △재생에너지 및 재활용 소재 사용 기술(The use of renewable energy and renewable materials),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Sustainable natural resource management), △지속가능한 포괄적 농촌개발(Sustainable and inclusive rural development)이 있음.

-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농업 및 바이오기술 기반 경제 분야에 유럽투자은행은 327억 유로 규모의 협조융자[7)](co-financing)를 제공해 왔음.

6) 유럽투자은행에서 발표한 "A vision for rural Europe – Harnessing the potential of rural areas to contribute to a sustainable & prosperous Europe"(2020.7.7.), "Agriculture, bioeconomy and rural development OVERVIEW"(2020)의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국제 농업 정보 II (2020. 8): 미국, 유럽,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 순환경제에 대한 융자는 자원 효율적인 농식품 생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플라스틱 대체재를 이용한 식품 포장 등으로 사용됨.

- 이러한 융자의 사례로는,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의 축산 시설 설치 및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성 개선, △루마니아의 Winnow사의 음식물 쓰레기 관리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한 식당들의 음식물 관리 효율화 등이 있음.

■ **[농촌생활환경 개선]** 조림 사업 시행 및 현대적 인프라 설치를 통하여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생활환경에 대한 개선을 시도함.

- 특히, 낙후된 광대역 인터넷 접근성 보완을 통하여 인터넷 접근성을 높일 뿐 아니라,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스마트농업(Smart eco-efficient agriculture)으로의 전환을 가능[8]하게 함.

■ **[농촌 일자리 확보]** 농식품가치사슬에 포함된 농민, 협동조합, 중소규모업체(SMEs and Midcaps)에게 우선적으로 융자 지원을 하고 있음.

- 최근 약 80%가량의 관련 융자가 투자되었으며, 코로나19에서의 회복을 위해 약 7억 유로의 융자가 추가적으로 배정되었음.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08 .18.).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 바이오기반경제에 대한 협조융자는 농업·식품·산림 산업 분야에 40%, 농업 생산에 29.7%, 도소매업 관련 부문에 2.1.7%가 사용되었으며, 임업 생산, 자원 보호, 바이오에너지, 수산업 및 양식업 등에도 융자가 지급됨.

8) 광대역 인터넷 보급 정책은 유럽연합의 농촌개발계획에서도 공통으로 다루어지는 내용으로, 유럽연합이 진행하려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Farm to Fork), 개정된 공동농업협정 등에서도 강조되고 있음.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1 일본 정부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 등 발표[9)]

■ 일본 정부는 2020년 7월 17일,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과 규제개혁실시계획, 성장전략실행계획을 발표하였음.

-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에서는 코로나19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식량안보확립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생산기반 강화를 중심으로 한 식량·농업·농촌 기본계획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규제개혁 실시계획에서는 농산물검사와 농업법인 자금조달 제도 등 검증·재검토에 관한 내용을 담았음.

■ 한편, 아베 총리는 같은 날 2020년 7월 17일 경제 자문회의·미래투자회의에서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인해 역사적인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과감하게 사회변혁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 농업 분야에서는 식량안보확립을 위한 생산기반 강화 및 식량 자급률·자급력 향상 등을 제시하였음. 가공식품 및 외식·간편식의 원료를 국산 농산물로 전환, 수출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며, 농업개혁을 지속하여 추진하겠다는 뜻도 나타냄.

- 방재·감재 대책으로 저수지 정비를 제시했으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방 이전에 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을 기반으로 두 지역 거주 및 관계인구 창출·확대를 추진함.

■ **[규제개혁실시계획]** 농산물검사에 대하여 2020년도 중에 미검사 쌀의 산지·품종·생산 연도 표기 및 보조금 교부를 조건부로 가능하도록 하였음. 쌀에 대한 새로운 일본농림규격(JAS) 제정 등은 2021년 상반기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임.

- **(농협개혁)** 조합원의 의사를 JA(일본농협) 경영에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2021년 4월에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농업법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농지소유적격법인의 의결권 요구 등을 염두에 둔 농지법 등을 현행제도를 검증하여 2020년 중에 정할 전망임.

9) 일본농업신문 「骨太方針決定 食料安保を明確化 農業改革は継続」(2020.7.18.)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국제 농업 정보 II (2020. 8): 미국, 유럽,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 [성장전략실행계획] 코로나19에 따른 변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일하는 방식 정착과 일부 지역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침을 담았음. 이와 관련하여 농림업·어업 스마트화를 검토하기로 함.

| 표 1. 정부방침 주요 내용 |

구분	주요 내용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	• 식량 자급률·자급력 향상 • 식량안보 및 농업에 대한 국민 이해 양성 • 중산간지역을 포함한 국내 생산기반 강화 • 가공식품 및 외식·간편식 원료 국산화 • 농림수산물·식품 수출 강화
규제개혁실시계획	• 농업법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현행제도 검증 • 농협개혁(JA 자기개혁) 경영에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법 검토 • 농산물검사규격 총 점검, 검사법에 기반한 검사 이외의 선택지 가능
성장전략실행계획	• 농림업 스마트화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08 .03.).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2020년 7월 호우 피해지원[10)]

■ 일본 농림수산성은 2020년 7월 30일, 7월 호우로 인한 농림수산 피해 지원책을 발표하였음.

■ 호우로 인해 대규모 풍수해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지원 시 매년 재해가 반복되는 지역의 피해 방지 및 원형 복구 이상의 개량 복구를 염두에 둘 것을 강조하였으며, 농업 외에도 임야 및 수산 분야 복구 지원도 추진함.

■ 이번 호우로 인해 하천이 범람하여 침수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농경지 등에 토사 유입되었으며, 농업용 하우스 및 농기계, 축산물 처리가공시설, 임지 등에서 큰 피해가 발생함.

■ 농림수산성은 호우로 인해 재해를 입은 농림어업인을 대상으로 생활·생업 지원 패키지로 지원하고자 함. 지원 패키지로 △농경지에 유입된 토사 제거 지원, △반복되는 피해 방지를 기반으로 한 복구, △농업용 하우스·농기계, 과수 등 재정비 지원을 추진함.

-(피해복구사업 촉진) 반복되는 피해 방지를 위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는 피해복구 국고 보조율을 향상[11)]하고 긴급지원을 통한 조기 복구를 지원함. 재해 관련 자금 특례로는 5년간 실질적 무이자화, 대출 한도액 인상 등을 시행함.

10) 일본농업신문 「骨太方針決定 食料安保を明確化 農業改革は継続」(2020.7.18.)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11) 농지 83% → 96%, 농업용 시설 93 → 98%로 피해 복구 보조율이 향상됨.

- (농업용 하우스, 공동 시설 지원) 농업용 하우스, 농기계, 농업전용 트럭 도입비용을 지원함 (보조율 1/2).

- (영농 재개 지원) 벼농사를 유지하기 위한 토양관리 및 논 정비를 위한 작업 위탁비 등을 지원함 (보조율 1/2).

- (과수 지원) 과수 교체와 이에 따라 발생하는 미수익 기간 경비(10a 22만 엔) 등을 지원함.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08 .10.).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농협관광 사회적 농업 사업화[12)]

■ 농협관광[13)]은 농가와 장애인, 기업을 연계하는 사회적 농업 연계 지원을 통해 새로운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함.

■ 노동력 수요가 높아지는 11월에 첫 번째 사무실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2025년까지 일본 내에 35개소의 거점을 설치할 계획임.

■ 농협관광에서 소개한 장애인을 기업이 고용하여,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작업 위탁계약을 맺는 구조임. 농가의 노동력확보, 장애인의 안정적 취업, 기업의 장애인 채용확대 측면의 장점이 있음.

■ 농협관광은 그동안 여행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관광산업 경쟁 심화 등 환경변화로 인하여 2019년부터 새로운 사업 검토에 착수하였음.

-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관광업이 더 큰 타격을 받아 사회적 농업 연계사업을 여행사업 수준의 주요 사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 [농협관광] 장애인 취업을 지원하는 시설 등과 연계를 통해 인력을 확보하여 면접 등을 거쳐 개인별 맞는 업무를 연계함.

- 농가에 제도 활용 제안 및 노동력 수요 파악은 JA(일본 농협)와 연계하여 추진함.

12) 일본농업신문 「骨太方針決定 食料安保を明確化 農業改革は継続」(2020.7.18.)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정리하여 작성함.
13) JA(일본 농협) 그룹의 여행회사를 의미함.

국제 농업 정보 II (2020. 8): 미국, 유럽, 일본 농업·농촌·식품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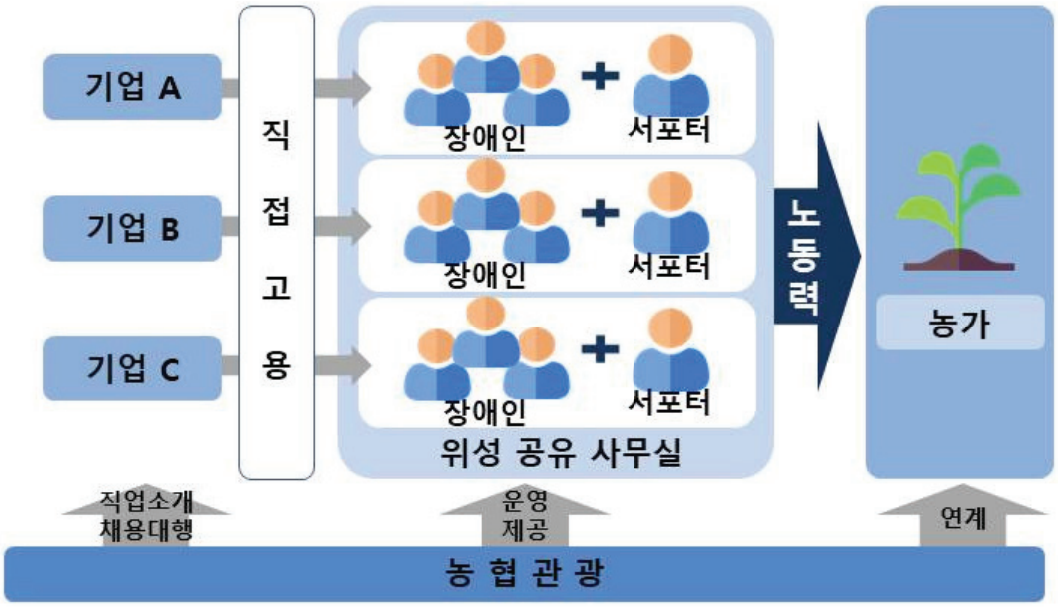
■ [기업] 장애인 3명과 농가의 지시를 전달하는 서포터 1명을 하나의 팀으로 고용함. 농협관광이 산지에 위성 공유 사무실을 설치하여 각 기업이 고용한 팀을 인근 농가 파견함.

- 농업 및 식품, 복지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은 사회공헌 실현, 장애인 법정 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음.

■ [농가] 직접 장애인에게 업무 지시를 할 필요가 없으며, 작업량에 따라 금액이 책정되어 작업 요금을 파악하기 쉬움.

■ 농협관광은 현(県)[14]중앙회 및 JA에 안내를 시작하였으며, 관심을 보인 JA도 있음.

| 농협관광의 사회적 농업 지원 |



※ 자료: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2020.08.18.). 미래정책연구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4) 일본의 행정 구분 단위로 가장 큰 지방 공공단체를 말함.

e-세계농업 제4호 (2020. 8.)

발 행 2020년 8월 17일
발행인 김홍상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팩시밀리 061-820-2211
http://www.krei.re.kr
편 집 동양문화인쇄포럼
전화 061-332-7120 팩시밀리 061-333-2247
E-mail: dongyt@chol.com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